



군보는 공문으로써의 효력을 갖는다.

선	군	수
람		

# 군 보

제589호 2023.5.24.(수)호외

## 조 레

- 진안군 조례 제2671호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진안군 조례 제2672호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14
- 진안군 조례 제2673호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27
- 진안군 조례 제2674호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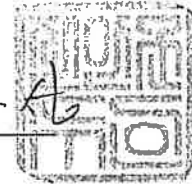
## 규 칙

- 진안군 규칙 제1310호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45

발행 진 안 군 (편집 기획홍보실(063)430-2822)

진안군의회에서 의결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 안 군 수 지 훈



2023년 5월 24일

진안군 조례 제2671호

####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제6호, 제7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산부”란 출산 당시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몸무게가 500g 이상 이거나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인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8. “산후조리 비용”이란 출산부의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9.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1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산후조리 비용

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출산 전 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④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시 지원대상이 된다.

1. 입국 이후 진안군에 거주하면서 진안군에 자녀를 출생신고

2.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⑤ 제4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국외(산모의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출생일 이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부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로 한다.

제9조(지원기준) 군수는 출산부의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군수는 제8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 제8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 중 “군수는 제8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영유”를 “영유아”로, “입양일”을 “입양일, 입국일”로, “지원대상”을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입양일”을 “입양일, 입국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장 또는”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을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산후조리 비용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신청인이 1년 미만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출산부”란 출산 당시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몸무게가 500g 이상이거나 임신 주수가 20주 이상인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5.·6. (생략)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신설>	8. “산후조리 비용”이란 출산부의 건강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신설>	9.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7. “보호자”란 부모 또는 부모의 사망·이혼·직업 등의 이유	<삭제>

로 부모를 대신하여 영유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8. (생 략)

<신 설>

제3조(출산장려사업 지원) 진안군  
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3. 4. (생 략)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  
② (생 략)

<신 설>

10. (현행 제8호와 같음)

1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출산장려사업 지원)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산후조리 비용

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출산 전 군으로 전입할 계획  
이 있었으나, 출산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출생일 당시 군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군  
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 지급하기로 한다. 단,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신 설>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④ 다문화가족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시 지원대상이 된다.

1. 입국 이후 진안군에 거주하면서 진안군에 자녀를 출생신고

2. 지원금 신청기한 내에 지원금을 신청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국외(산모의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출생일이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다면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신 설>

제8조(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부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로 한다.

<신 설>

제9조(지원기준) 군수는 출산부의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산후조리 비용을



제8조 (생 략)

제9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산모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별표”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교육비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별표”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강관리사 교통비 지급)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모에게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한 건강관리사에게 “별표”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영유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한다.

제10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1조(지원기준) ① 제10조제1항

-----  
-----  
-----  
-----  
-----.

② 제10조제2항

-----  
-----  
-----  
-----  
-----.

제12조(건강관리사 교통비 지급)

제10조제1항

-----  
-----  
-----  
-----.

제13조(지원신청) ①

----- 영유  
아----- 입양일, 입국일-

-----  
-----  
-----  
-----  
-----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유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군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임신축하금은 보건소장 또는 읍·면장에게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지원대상 ---, -----  
 --- 입양일, 입국일 -----

② -----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장 또는 -----

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산후조리 비용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신청인이 1년 미만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③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이용료 신청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본인이 부담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신청은 교육과정 수료 후 1년 이내에 별지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0조에 따른 건강관리사 교통비 신청은 별지제5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 ~ 제15조 (생략)

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  
-----  
-----  
-----  
-----

⑤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  
-----  
-----  
-----  
-----  
-----

⑥ 제12조

-----  
-----  
-----  
-----  
-----  
-----

제14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 [별표]

임신·출산 지원 내용(제5조제1항, 제7조, 제9조, 제11조 관련)

시책명	지원내용	비 고
1. 출산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첫째아 : 300만원</li> <li>· 신청첫달 100만원</li> <li>· 12개월째 50만원</li> <li>· 24개월째 50만원</li> <li>· 36개월째 100만원</li> </ul>	- 개월 산정은 신청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둘째아 : 500만원</li> <li>· 신청첫달 150만원</li> <li>· 12개월째 100만원</li> <li>· 24개월째 100만원</li> <li>· 36개월째 15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아 이상 : 1,000만원</li> <li>· 신청첫달 300만원</li> <li>· 12개월째 300만원</li> <li>· 24개월째 200만원</li> <li>· 36개월째 200만원</li> </ul>	
2. 임신축하금	- 임신축하금 100만원 지원 (1회)	- 20주 이상 임신부
3. 산후조리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산모</li> <li>· 200만원 지원(1회)</li> <li>- 그 외 산모</li> <li>· 100만원 지원(1회)</li> </ul>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li> <li>· 산모 본인부담금의 90%</li> </ul>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사 양성교육비 지원</li> <li>· 교 육 비 : 총액의 50%</li> <li>· 교육보상금: 일 당 100,000원(신규)</li> <li>일 당 28,000원(경력)</li> </ul>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교육비 지원요건 및 지급절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li> <li>· 서비스 제공일 당 10,000원</li> </ul>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자바우처시스템 생성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앞쪽]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 인)	성명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 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출산자 (산모)	성명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자			[ ] 예 [ ] 아니오		
자치 단체 서비스	출산 지원금	<input type="checkbox"/> 자녀 이름 [ ] 첫째자녀(이름: ) [ ] 둘째자녀(이름: ) [ ] 셋째자녀(이름: ) [ ] 넷째자녀 이상(이름: ) <input type="checkbox"/> 보호자이름 : <input type="checkbox"/> 신생아와의 관계 : <input type="checkbox"/> 전출입일자 :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명/예금주 :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				
	산후조리 비용지원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비(현금) ※ 진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을 한 출산부로서,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전국 공동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 이상)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도시가스료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 이상)						
지역난방비 경감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양육방자치동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동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접수자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확인		처리자	복지담당자 확인		수신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출생사실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사항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input type="checkbox"/> 한국전력공사 성명 : <input type="checkbox"/> 진안도시가스 성명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사항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또는 손( )째					
	20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본 서식의 서비스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서부모

##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 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7.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물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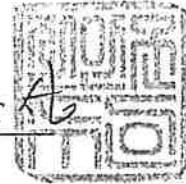
신청인(대리 신청인)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대리신청인)	→	접수 읍·면·동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사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신청통지 및 서비스제공 사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도시가스회사, 난방공사 등
--------------------------	---	-------------	---	--	---	---

진안군의회에서 의결된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 안 군 수 려 인



2023년 5월 24일

진안군 조례 제2672호

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군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군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군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군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군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진안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진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진안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장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제10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군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진안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라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전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20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로·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지역 물관리 사업)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군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8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군수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9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31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군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진안군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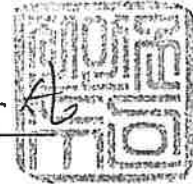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진안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진안군의회에서 의결된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 안 군 수 지 령



2023년 5월 24일

진안군 조례 제2673호

### 진안군의회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진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재직 중 전 구성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지요원, 무기계약(공무직)·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포함)과 소속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되며, 진안군의회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자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동 표준안 제13조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운영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진안군의회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진안군의회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관련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진안군의회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의회사무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의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 의장과 해당 기관, 단체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전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의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1]

접수번호	
담당자	

## 성희롱 고충사건 접수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의 중지(                      )                      2.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성희롱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O 귀하



[별 표2]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사실 통보서

담당자(직급)	
연락처	
통보일시	년 월 일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 기관명	/ 00도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행위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행위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 인가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 일)				
주요내용 (사건 신고 접수 개 요 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기타

진안군의회에서 의결된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진 안 군 수 지 훈



2023년 5월 24일

진안군 조례 제2674호

###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안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운임 및 숙박비 지급)”을 “(국내여비 지급)”으로 하고, 같은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배”를 “5배”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진안군의회 국내 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	------	------	------	-----------	--------------	--------------	--------------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율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  
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  
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별표1]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u>70,000</u> 광역시 <u>60,000</u> 그 밖의 지역은 <u>50,000</u> )

## 개정안

제4조(국내여비 지급) -----  
-----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  
-----.

제5조(여비 부담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  
-----  
----- 5배 -----  
-----.

### [별표1]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특별시 <u>100,000</u> 광역시 <u>80,000</u> 그 밖의 지역은 <u>70,000</u> )	25,000

## [별표 1]

**진안군의회 국내 여비 지급표**(제4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진안군의회에서 의결된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진 안 군 수 장 증 서



2023년 5월 24일

진안군 규칙 제1310호

####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안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필요시”를 “한 차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의사팀장”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진안군의  
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략) 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④ ----- - 한 차례 ----- ----- -----.
제7조(회의) ① ~ ② (생략)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 이 된다. ④ ~ ⑥ (생략)	제7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의정팀장 이 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 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안군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 ----- -----「진안군의회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 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4.(생략) ② (생략)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 -----<후 단 삭제> 1. ~ 4.(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